



Global Goings-on

아시아

결혼 없는 아시아 The Decline of Asian Marriage

- ▶ 아시아의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과급효과가 커
- ▶ 그 동안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은 아메리카나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더 강하며 이 가치관이 아시아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여겨져 왔음.
 - 싱가포르의 국부인 Lee Kuan Yew는 중국의 가족은 학업과 근면과 절약을 권장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미룰 줄 안다고 말한 바 있어
- ▶ 서양에서는 결혼의 절반이 이혼으로 끝나며 아이들의 절반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나는 데 반해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 결혼이 성행하고 사생자가 많지 않아
 - 부모의 지도나 가족간의 공경에 대해 배우지 못한 결과로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영국에서의 최근 폭동은 동양과 서양의 깊은

골을 잘 보여주는 듯

- ▶ 그러나 각각 전통이 다른 동아시아, 동남아시아, 남아시아에서 결혼 풍습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
 - 20세기 후반 서양에서 일어난 변화, 즉 이혼의 증가와는 달리,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결혼으로부터의 탈출
- ▶ 결혼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것
 - 결혼연령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특히 아시아에서 두드러져
 - 일본, 대만, 한국, 홍콩과 같이 부유한 곳에서의 평균 결혼연령은 지난 몇 십년 간 가파른 속도로 상승해 여자는 29~30세, 남자는 31~33세
- ▶ 또 많은 아시아인들이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
 - 30대 초반의 일본 여성 3분의 1이 미혼이며 이 중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것
 - 30대 후반의 대만 여성 5분의 1 이상이 미혼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것

-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미혼율이 놀랄 정도로 높아: 방콕에서는 40~44세 여성의 20%가 미혼; 도쿄에서는 21%; 싱가포르에서는 이 연령대의 대학졸업 여성 27%가 미혼
 - 현재까지 중국과 인도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경향을 끌고 온 경제적 요인들이 이 두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
 - 결혼에 대한 새로운 풍습과 남성 선호사상이 맞물려 2050년에는 결혼적령기의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6천만 명 더 많게 될 것
- ▶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
- 아시아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일을 하기 어렵지 않아
 - 아시아에서 여성은 남편, 자녀, 또 종종 조부모들을 돌봐야 하며 이는 직장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
 - 여성의 이러한 직장과 가정에서의 의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일하지만 그 부담이 아시아 여성들에게는 특히 더 심해
 - 일주일에 사무실에서 40시간 일하는 일본 여성은 가사 노동으로 또 다른 30시간을 일 하는 반면 남편은 가사 노동에 평균 3시간을 할애
 -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잠시 일을 접은 여성이 아이가 성장한 후 직업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어
 - 따라서 아시아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
- 올해 실시된 한 연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 여성들의 수는 남성보다 현저히 적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더 높아
- ▶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 회피 현상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사회문제도 야기하고 있어
- 서구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연금과 기타 사회보호장치에 대한 투자가 미약해
 - 결혼인구의 감소는 출산율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거대한 인구문제를 양산하고 있어
- ▶ 아시아에서 결혼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?
- 성 역할에 대한 기대에 변화가 생긴다면 가능해
 - 정부가 법으로 성에 대한 선호도를 바꿀 수는 없으나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어
 - 이혼에 관한 법을 완화하여 이혼이 쉬워질수록 젊은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선택도 쉬워 질 것;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이혼으로 헤어지면 된다는 생각이 결혼을 보다 쉽게 성사시킬 것
 - 또한 가족법을 통해 이혼한 여성들에게 부재산에 대해 보다 관대한 몫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
 - 또한 정부는 기업이 남녀 고용인 모두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양육비 보조금도 제공해야 해

- 이와 같은 정책에 소요된 비용이 가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미래에 국가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부담을 덜게 될 것
- ▶ 아시아 정부들은 아시아의 가족 시스템이 서구사회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겨 와
 - 이와 같은 자신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
 -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사회변화에 눈을 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해

2011년 8월 20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21526329>〉

미 국

결과 지향적 보수지불방식을 실험 중인 메디케어

Medicare Extends Experiment in Paying Doctors

- ▶ 지난 5년 간의 실험을 통해 메디케어 관계자들은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대신 외래로 치료를 진행하는 의사들이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믿게 돼
- ▶ 2005년 4월 시작된 실험에서 10개 그룹의 의사들은 심장마비, 당뇨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1억3천4백만 달러 감소하면서 치료의 질은 상당 수준 올려
 - 다양한 의료 평가 방식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실험 참가 의사들은 절감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나눠 가져
- ▶ 메디케어는 Physician Group Practice Demonstration이라 불린 이 실험을 2011년 1월부터 2년 간 연장한다고 발표해
- ▶ 메디케어가가 이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보수지불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
 - 이 실험에서 메디케어는 검사나 시술 회수가 많을수록 보수도 많아지는 보수지불방식 대신 환자들을 불필요하게 입원시키거나 응급실에서 시술하는 대신 질 높은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
- ▶ 연방정부 관계자들도 메디케어의 실험에 흥미를 갖고 있어
 -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코디네이션(조정)함에 있어, 이 실험에서 얻은 교훈이 메디케어가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 비용은 절감하는 지불방식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메디케어의 Donald M. Berwick 박사는 말해

▶ 실험에 참가했던 위스콘신 Marshfield Clinic 과 미시간대학 Faculty Group Practice는 지난 오 년간 절감된 비용의 몫을 분배 받았으며 5년 짜 되던 해에는 의사 그룹 네 곳이 메 디케어가 절감한 비용 3천6백만 달러 중 2천 9백만 달러를 나눠 받아

▶ 실험에 참가한 Park Nicollet's의 CEO인 David Abelson박사는 실험 결과, 의료 서비스 제공 양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이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며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

2011년 8월 8일 / The New York Times
 <원문 링크: <http://prescriptions.blogs.nytimes.com/2011/08/08/medicare-extends-experiment-in-paying-doctors/>>

공격받고 있는 건보개혁 Health Reform under Attack

▶ Barack 오바마가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서명한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아 미국 13개 주에서는 이를 뒤엎을 소송이 제기됐으며 다른 주들도 이들을 뒤따라

- Georgia의 법무장관이 머뭇거리자 지역 공화당원들은 그를 탄핵할 것을 요구해
- 결국 26개 주가 건보개혁법안을 전복하려는 소송을 제기해

▶ 8월 12일 Atlanta 연방 항소법원은 개혁 건보법의 보험가입의무규정을 위헌으로 규정해

- 건보개혁과의 전쟁에서 공화당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셈
- 물론 개혁건보법은 여전히 유효
- 이번 공판은 개혁 건보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암시해

▶ 2010년 3월 개혁법을 통과시킨 후 민주당은 다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

- 많은 주정부들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(health exchanges) 설립을 늦추고 있으며 일부 주지사들은 주정부로부터의 관련 자금도 거절해
-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Repealing the Job-Killing Health Care Law Act와 같은 방법들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기는 불가능
- 하지만 내년 선거에 유리한 홍보물이 될 듯

▶ 실제적인 전쟁은 법정에서 진행 중

- 제기된 소송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논리는 개인 가입 “의무”조항이 미국 내 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헌법에 위배하는 수준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것
- 보험을 사지 않음으로써 개인은 그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비행동(inactivity)에 국회가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가 간섭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게 될 것
- 아마도 헬스장 회원권 구입도 강제할지도

- ▶ Atlanta 항소법원은 이런 주장에 동의해
 - 2대1의 결정문에서 판사들은 경제적 의무 조항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계를 넘어선 국회권한 행사라고 지적해
 - 이번 결정은 개혁건보법 전체를 무효로 선언한 하급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오직 “개인의 가입 의무 조항”만 위헌 판결해
 - 그러나 “개인 의무조항”은 개혁의 주요 골자 중 하나
 - 위헌 판결이 있을 후 공화당은 개혁건보의 몰락을 확신해

- ▶ 그러나 6월 오하이오의 상소법원은 개인의 무조항에 손을 들어 줘
 - 현재 버지니아와 워싱턴 D.C.에도 소가 제기된 상태
 - 결국 전쟁의 승리는 연방최고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나 그게 언제가 될 지는 아직 미지수

2011년 8월 20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21526390>〉